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2월 8일 수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         |     |                                      |    |
|---------|-----|--------------------------------------|----|
| 江原日報    | 온라인 | [포토뉴스]강원도의회 새해 첫 회기                  | 1  |
| 江原日報    | 03면 | “ 특별자치도 핵심적 권한 이양 위한 전략 필요 ”         | 2  |
| 강원도민일보  | 02면 | "유명인 · 기관 동참, 경제 어려운 상황 속 강원도에 큰 힘"  | 3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강특법 개정안 발의 여야 협치 결과" 한 목소리          | 3  |
| 江原日報    | 02면 | 김진태 지사 “ 강릉 제2청사는 분산 아닌 확장 ”         | 4  |
| 강원도민일보  | 03면 |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실질적 특례발굴 주문             | 4  |
| 스포츠조선   |     | 강원도대학포럼, 15일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 주제 토론... | 5  |
| 스포츠조선   |     | 강원도대학포럼, 15일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 주제 토론... | 6  |
| 한국농어민신문 | 온라인 | 한농연 · 한여농강릉시, 이 · 취임식                | 7  |
| 江原日報    | 21면 | “ 활발한 교류 · 정책 통해 당당한 여성농업인의 길 걸어가자 ” | 7  |
| 노컷뉴스    | 온라인 |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중앙부처 소통 ...   | 8  |
| 江原日報    | 온라인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도지부 정기총회... “ 노인 돌봄 ... | 9  |
| 江原日報    | 온라인 | “ 응급의료취약 지역 해결 방안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돼야 ”    | 10 |
| 강원도민일보  | 20면 | [수요광장]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해야           | 11 |
| KBS 춘천  | 온라인 |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해외 시찰 추진                 | 12 |
| KBS 강릉  | 온라인 |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도청 2청사 설치는 분산 아닌 확... | 13 |
| 강원도민일보  | 01면 | "오색케이블카 반대 말고 등산로 쓰레기 줍는 활동부터"       | 13 |
| 江原日報    | 온라인 | 3월 환경협약, 4월 투자심사...오색케이블카 로드맵 나왔다    | 14 |
| 쿠키뉴스    | 온라인 | 신경호 강원교육감 “ 강원교육 3대 중점 정책 추진 ”       | 15 |
| KBS 강릉  | 온라인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강원도교육청 업무 협약            | 16 |
| 강원도민일보  | 21면 | [사설] 무료급식소는 서민 생계 보루                 | 17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강원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지금부터가 중요      | 18 |
| 강원도민일보  | 21면 | [사설] 전문인력 강화 영월군 행정 주목된다             | 19 |
| 江原日報    | 19면 | [사설] 법인 폐업 매년 증가,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 20 |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7일 (화)  
정치

## [포토뉴스]강원도의회 새해 첫 회기



2023년도 첫회기인 2023년도 강원도의회 제 316회 임시회가 7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3년도 첫회기인 2023년도 강원도의회 제 316회 임시회가 7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3년도 첫회기인 2023년도 강원도의회 제 316회 임시회가 7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종합 03면



◇2023년도 첫 회기인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7일 본회의장에서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 “특별자치도 핵심적 권한 이양 위한 전략 필요”

### 도의회 5분 발언서 제기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 이르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 출신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동북부권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진료는 속초의료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주 4일만 야간 응급실이 운영된다”며 “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마련,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1) 의원은



◇이지영 의원



◇김길수 의원



◇홍성기 의원



◇이기찬 의원



◇진종호 의원

력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 찬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 중앙부처와 소통해야 하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시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한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2)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지역사회 역량과 행정

양구) 의원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18개 시·군에서 1,800만 그루 나무 심기 강원도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적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며 “농지 관련 특례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선행 사례를 뛰어넘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종합 02면

# “유명인·기관 동참, 경제 어려운 상황 속 강원도에 큰 힘”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  
강원도민회 중앙회-강원도-강원도민일보

도의회 본회의 후 캠페인 동참  
제도 취지 공감·홍보 의지 다져  
“투명 운영 지역경제 발전 견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에 대한 범도민적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캠페인에 동참하며, 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7일 제316회 본회의 종료 뒤 의회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에 동참, 기부 활성화를 독려하는 기념촬영식을 가졌다. 본지와 강원도, 강원도민회중앙회는 새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권혁열 도의회의장과 도의원들이 7일 도의회 현관앞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범국민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서영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확산돼 활성화되고 있다”며 “유명인, 기관 등에서 동참해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강원도에 큰 힘이 돼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 같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권 의장은 지난달 초, 거주지 강릉을 제외한 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영동지역 5개 시·군에 기부했다.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고향을 사랑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제도에

깊이 공감한다. 도내 많은 분들과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투명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이끌고, 도민분들께 기대를 안겨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영근 운영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고향 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의원들도 기부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역 주민들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박윤미 도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아 도내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의 기부제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희 (춘천)·임미선 (비례) 의원은 정경지역에, 김용래 (강릉)·박대현 (화천) 의원은 태백시에, 문관현 (태백) 의원이 강릉시와 화천군에 기부했다. 또, 전길택 사무처장, 이병승 의정관, 유택희 의사관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 각 지역에 기부했다.

이철화·김덕형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종합 03면

# “강특법 개정안 발의 여야 협치 결과” 한 목소리

민주 “대표발의 여·야·정 협치 시즌2”  
국힘 “정부부처 적극적인 협조 기대”  
도의회 “법의 내실 갖춰야” 지적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두고 “여·야 협치의 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우영)은 7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월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강원도 국비 첫 9조원 확보가 여·야·정 (여당·야당·강원도) 협치 시즌1이었다면, 허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는 여·야·정 협치 시즌2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 유상범)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대표발의를 비롯해 상당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만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회의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의회에서는 법의 내실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열 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도의원 총회에서 “개정안에 담긴 130여개 조문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봐야한다”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자기의 공적을 쌓으려고 비치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강원도에) 전했다”고 말했다.

이철화 lofi@kado.net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종합 02면

## 김진태 지사 “강릉 제2청사는 분산 아닌 확장”

도의회 신년 연설서 밝혀... 직원 이동 최소화 약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청 제2청사 강릉 설치는 도청의 ‘분산’이 아닌 ‘확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도청 제2청사 강릉 설치에는 영동권 숙원사업으로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 본청 기능과 인원을 강제 분산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영동권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고 도청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직원 이동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법률을 바꾸면 시행령도 만들고 조례도 바뀌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이어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일부 환경단체가 또다시 환경부를 압박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이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 중이고 도민 숙원을 일부 환경단체가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환경단체를 향해

서는 “가을 설악산에 와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부터 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신경호 도교육감도 이날 신년 연설에 나서 “도에서 역점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에 발맞춰 춘천·원주·강릉 권역별 직업계고에 반도체 전문 학과를 만들어 해마다 100명 이상의 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강원도형 성장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강원도형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실질적 특례발굴 주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다짐

7일 개최한 강원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연계해 1차 목표로 규제완화와 기본 권한 이양 설정과 함께 의료 공백 해결을 비롯한 실질적인 특례 발굴이 주문됐다.

이날 신년연설에 나선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감동의 협치를 이어가자”고 했고, 신경호 도교육감은 “더 특별한 강원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 피해가 가장 컸던 규제완화와 기본 권한이양을 1차 목표로 선정하자”고 강조했다. 이지영(비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서 응급의료 관련 특례는 응급상황에서 119구조대원의 휴대용 X-ray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 하나”라며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발굴을 요청했다.

진중호(양양) 의원은 “곡간폭 100m 이하의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7일 도의회(의장 권혁열)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서영



김길수 이지영 진중호 홍성기 이기찬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농업진흥지역의 1.07%, 472.7ha가 포함됐다”며 “불필요한 지정지역을 조속히 해제하라”고 했다. 홍성기(홍천)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산지가 많은 강원지역의 경우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는 기준치를 충족할 수 없

다”고 행정력 결집을 요청했다. 이기찬(양구) 의원은 “18개 시·군 1800만 그루 나무심기 강원도민운동을 제안한다”며 “내년

식목일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595억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지사는 “강원도민 스스로 강원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율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고, 신 교육감은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 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설화·김택형



**스포츠조선**

2023년 02월 07일 (화)  
경제

## 강원도대학포럼, 15일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 주제 토론의 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강원도대학포럼

— 제5차 상상과 속의광장 —

####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

지역대학 살리기를 위한 강원도의 과제와  
강원도형 대학체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논의하는 상상과 속의 광장에 초대합니다.

일 시 2023년 2월 15일 (수) 오후2시~4시  
등 록 오후 1시 30분부터  
장 소 강원도의회 제04나홀

주 관 강원도대학포럼  
주 최 강원도의회, 강원도대학포럼

#### 포럼 순서

**개회사** 장건구(한림대 교수,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

**환영사** 권학열(강원도의회 의장)

**축사** 김현영(강원대 총장)

반선섭(강원지적대학 총장협의회장, 강릉원주대 총장)

유만희(상지대 총장 직무대행)

허영(국회의원)

**차장** 박정원(상지대 명예교수,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

**발제** 발제1 신승훈(강릉원주대 명예교수,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  
- 지역대학 극복을 위한 강원도의 과제- 지역대학 살리기

발제2 김대건(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 강원도대학포럼 총괄기획위원장)  
- 강원도형 대학체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토론** 홍석민(한림대 교수, 기획자랑)

김광민(상지대 교수, 기획자랑)

왕보현(강릉원주대 교수, 교수회 회장)

김경준(강릉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강원도대학포럼

**주최** 강원지적대학 교수

**교류단** 언론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춘천MBC, 영주MBC, G1방송, 강원CBS, 영동MBC

**경제계**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강원상공회의소, 영주상공회의소, 춘천상공회의소

**시민사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시민연대/  
춘천YMCA/춘천생명의숲/춘천강살리기/원주시민연대/  
원주환경운동연합/강릉시민사회단체/원주YMCA/  
원주지역연립/강릉시민환경생태/강릉강살리기/강릉환경운동/  
강릉시민생태/속초YMCA/속초고양이강살리기운동연합/  
대박생명의 숲/강릉동시강보초원부/원주환경운동연합

**상설조직** 공동대표(운영위원장 포함), 총괄기획과, 대외협력과, 학술분과

## 스포츠조선

2023년 02월 07일 (화)

경제

[강원도대학포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5차 상상과 속의 광장...지자체, 의회, 대학 역할 모색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초정파적 협력기구인 '강원도대학포럼'이 다섯 번째 토론의 장을 연다.

강원도대학포럼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도형 고등교육 혁신'을 주제로 제5차 '상상과 속의 광장'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자체, 의회, 대학이 짊어진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연구 강원도대학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혁열 도의회 의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반선섭 강원지역총장협의회장, 유만희 상지대 총장직무대행, 허영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승준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이어 김대건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장이 '강원도고등교육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대학의 위기와 지역의 소멸은 회색코뿔소에 비유되듯 알면서도 당하는 위험이자 재앙"이라며 "민·산·학·관·연의 협력으로 대학이 지역혁신과 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대학포럼은 도내 대학과 언론·경제·시민단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단체로 지난해 5월 19일 창립했다. 그동안 네 차례 포럼을 열어 강원지역 고등교육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을 다뤘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



# 한국농어민신문

2023년 02월 07일 (화)

인물

## 한농연·한여농강릉시, 이·취임식

이우정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 한농연강릉시연합회 14대·15대 회장, 한여농 강릉시연합회 11대·12대 회장 합동 이·취임식<사진>이 1월 30일 강릉시 강릉농협 본관 4층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심창보 한농연 강원도연합회장, 송영옥 한여농 강원도연합회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박호균 강원도의회 의원, 김진용 강릉시의회 행정위원장, 김용남 강릉시의회 산업위원장, 김홍수 강릉시 의회 의원, 금석환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안용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농업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소모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꾸준히 연구해 구체적인 소득증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릉=이우정 기자 leewj@agrient.co.kr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인물 21면

## “활발한 교류·정책 통해 당당한 여성농업인의 길 걸어가자”

한여농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송영옥 회장 등 임원구성 완료

여성농업인들의 우의를 다지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이 열렸다.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는 7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13·1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숙현 제13대 회장이 이임하고, 송영옥 수석부회장이 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수석부회장은 김정희 전 정책부회장, 정책부회장은 김미숙 전 사업부회장, 사업부회장은 김영미 전 양구군연합회장, 대외협력부회장은 김정옥 전 인제군연합회장, 감사는 김성주 전 삼척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제13·14대 회장 이·취임식이 7일 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송영옥 신임 회장과 남숙현 이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김진태 지사,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이숙원 한여농 중앙연합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장, 심희숙 전 화천군연합회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임하는 남숙현 회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지난 4년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신임 송영옥 회장은 “도와 각 시·군 간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 제안을 통해 당당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강원도에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등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올해 여성농업인에 대해 1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는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심창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도연합회장, 정덕교 고령지체소연합회 도연합회장, 김양금 한국생물개신 도연합회장, 남영준 도4-H연합회장, 임상현 도농업기술원장,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장, 김용옥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등 농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김동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상임부위원장, 홍경수 도경제진흥원장 등의 기관·단체장도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응원했다. 박석화기자

## 김길수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중앙부처 소통 필요"

핵심요약

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선택과 집중, 전략적 시도 필요"

"강원도 특별자치국 조직, 인력, 기능 보강해야"



김길수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6일 의원 발의된 가운데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길수 강원도의회의원(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은 7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률안 준비단계에서 최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초 법률안 제정을 대통령소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주체가 돼 1단계 법률 제정시 106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과 마찰을 사전조율해서 제주도와 의 갈등요인을 줄여 주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의 경우 의원 발의로 일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후속 실행과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더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요 권한이양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며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지혜와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제주도가 6차에 걸쳐 4660건의 권한이양을 받았지만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건은 5.5%에 불과한 287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실익이 없는 건수와 물량위주의 권한이양으로 행정 및 재정부담만 늘었다는 제주도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 도에 피해가 가장 컸던 규제완화와 자치도로서의 기본 권한이양을 1차 목표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2차, 3차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와의 협력, 중앙부처와의 협상, 언론 협조, 시군-유관기관 협력 등을 감안해 강원도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의 한시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316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신년 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도지부 정기총회..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하자”

장효진 강원지부장 연임 결정  
차인숙 센터장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지부장:장효진)가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지사, 허영 국회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전옥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현정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가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는 김진태 지사, 허영 국회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전옥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장, 도내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장효진 강원지부장의 연임이 결정됐고 표창.감사패 전달, 감사보고, 안전심의 등이 진행됐다. 차인숙 춘천 단비재가센터장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고 김명자 춘천 노블레스요양원 대표, 박정자 강릉 박정자재가복지센터장, 손춘희 동해 해오름종합복지센터 대표 등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지부장:장효진)가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지사, 허영 국회의원,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전옥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장효진 지부장은 “고령화로 장기요양의 양적인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노동 환경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장기요양기관 현장과 정책 사이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드리는 복지 수당을 강원도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금씩 늘리겠다. 복지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 국가가 충분히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부끄럽다. 처우 개선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7일 (화)  
종합

## “응급의료취약 지역 해결 방안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돼야”

이지영 강원도의원 “영동 북부권 야간응급실 주4일만 운영”

홍성기 도의원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성 아닌 지역균형발전 논리 필요”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 이르는 응급의료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 출신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영동북부권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진료는 속초의료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주 4일만 야간응급실이 운영된다”며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마련, 강원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1)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 중앙 부처와 소통해야 하고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선택과 집종의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필요 시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한시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2) 의원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성과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역량과 행정력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찬(국민의힘.양구) 의원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산림수도 강원역사에 남을 유산으로 만들기 위해 18개 시.군에서 1,800만 그루 나무심기 강원도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종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의 제도적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농지 관련 특례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선행 사례를 뛰어넘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오피니언 20면



수요광장

최재석 강원도의원

###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해야

동해안 벨트에 자리잡은 화력발전소가 송전선로를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 동해안 벨트의 화력과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16.1GW에 이르지만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할 선로가 없어 전기 생산을 줄여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건설됐다. 화력발전소는 주연료인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도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강원도만 해도 동해안을 따라 4곳의 화력발전소가 상업 발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강릉의 에코파워와 삼척의 포스파워가 시험운전에 들어가면 강원도의 전력자급률은

강원도 전력자급률 250%

수도권 전기공급 위해 희생

요금 차등시 전기 사용 많은

데이터센터 등 업체 유치 도움

2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가 213%,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경상북도도 자급률이 200%에 달한다. 반면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서울이 8.6%, 경기도가 59.8%에 불과하다.

온갖 환경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곳곳에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지만 실상은 수도권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희생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이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송전선로 건설에 투자한 비용만 2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송전선로 건설은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가 그랬고, 당진-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도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1년 완공됐어야 하지만 이대로라면 2029년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전선로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해 GS전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70%로 떨어졌고, 올해 4월부터는 40%, 24년에는 3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멸종한 발전기를 70% 이상 세워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지역별로 전기요금

에 차등을 두고, 발전소와 소비업체가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싼 값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을 줘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국정과제 수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중앙집중형으로 설계된 전력운용 시스템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KBS 춘천

2023년 02월 07일 (화)  
강원

##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해외 시찰 추진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공무원이 해외 시찰에 나섭니다.

강원도청사건립추진단은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푸르타자야시와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시설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외 시찰에는 도 예산과와 춘천시 공무원 등 8명이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경북도청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문영



##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청 2청사 설치는 분산 아닌 확장”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는 7월 1일 강릉 제2청사 운영 시작을 재차 공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7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신년연설을 통해 제2 청사 설치에 도청의 분산이 아니라 확장이라며 균형 발전과 영동권 행정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제2 청사 문제를 질질 끌면 지역 갈등은 더 커지고, 도청 직원 불안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면구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종합 01면

### “오색케이블카 반대 말고 등산로 쓰레기 줍는 활동부터”

#### 김진태 지사, 환경단체에 일침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향해 “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일부 환경단체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7일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년연설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안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를 좌초시키기 위해 또다시 환경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전국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이토록 오색케이블카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색케이블카

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 나아가, 등산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설악산을 사랑한다면, 가을 설악산에 와서 등산로의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부터 하길 바란다”며 “도지사로서 여러분과 같이 할 용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지사는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이렇듯 일부 환경단체들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강릉 제2청사 설치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철화 ▶관련기사 3면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정치

## 3월 환경협의, 4월 투자심사...오색케이블카 로드맵 나왔다

오는 11월까지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전망  
계획대로 추진 시 내년 봄 착공 가능 예상  
김진태 지사 “친환경 추진, 훼손 줄인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내년 착공(본보 1월26일자 1면 보도)을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올해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도와 양양군은 3월초 환경영향평가 종료와 확실히 되는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대비해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실제 심사는 오는 8월부터 이뤄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지않더라도 사전에 행안부로부터 사업계획과 경제성(B/C), 재무성·정책성에 대한 투자 심사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10~11월 중 오색케이블카의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내년 봄부터 착공이 가능해진다.

2015년 기준 오색케이블카의 총 사업비는 587억원이었으나 8년 가량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재원 분담은 ‘8(양양군):2(강원도)’가 유력하다. 양양군이 재정 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8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림청으로부터 산지 전용, 개발 행위 등의 인·허가를 받는 절차들이 남아있으나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실제 남은 행정 절차상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역시 7일 강원도의회 신년 연설에서 오색케이블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를 좌초시키기 위해 또다시 환경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전국에 수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오색케이블카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등산객들에 의한 산림훼손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끝청 해발 1,430m 지점, 3.3 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하부정류장 및 산책로, 중간지주 6개가 건설된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 초속 4.3m 편도 15분의 속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825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



## 쿠키뉴스

2023년 02월 08일 (수)  
지역

# 신경호 강원교육감 “강원교육 3대 중점 정책 추진”

하중천

"반도체 기술인재 배출할 것"



신경호 강원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7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신년연설에서 “올해부터 마음껏 펼쳐는 강원교육 3대 중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도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모든 학령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형 성장지원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현재 지난해 말 실시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 상담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은 학력지원관’을 구축해 학교의 학생성장관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강원학생의 종합적 학력을 진단하고 거시적·장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형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 현실에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플랫폼은 유일한 대안이자 기회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미래형 직업 교육을 통해 강원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에 교육청도 발맞춰 반도체 전문 인력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춘천·원주·강릉 권역별 직업계고에 반도체 전문 학과를 신설하고 매년 100여명의 학생을 반도체 기술인재로 배출할 것”이라며 “직업계학교 교육과정을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중점 육성하는 산업과 연계하고 장기적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학과 신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KBS 강릉

2023년 02월 07일 (화)  
강원

##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강원도교육청 업무 협약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이 오늘(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강원도 학생들이 산림엑스포 관람과 체험 학습을 통해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고성군 세계잰버리수련장 등에서 개최됩니다.

고순정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사설/칼럼 21면

### 무료급식소는 서민 생계 보루

-고물가따른 식자재값 상승으로 운영난, 대책 절실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 비중이 높아 생활고에 신음하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이 지속되자 일반 가정뿐 아니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의 운영도 어려워졌다는 소식입니다. 급식소는 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입니다. 사회복지안전망 유지를 위해서도 급식소 운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급식소 운영난은 고물가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난 1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올랐습니다. 이중 농수축산물은 1년 새 3% 증가했고, 전기, 수도, 가스비는 전년대비 무려 27.6%나 급등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양파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30.3%가 올랐고, 닭고기 역시 육계 1kg 기준 5858원으로 529원이 비싸졌습니다.

이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운영 중인 무료 급식소는 비용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종교시설이 주 3일 열고 있는 무료 급식소에는 평균 60~70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가스비까지 인상돼 식사의 양과 질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인당 5000원 단가에 맞춰 준비하기엔 예산이 빠듯합니다. 주메뉴로 고기나 생선이 나오면 나머지 반찬은 콩나물이나 감자 등 단가가 낮은 식재료로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 4일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은 지자체 지원 없이 평균 하루 예산 30만원과 기부받은 식재료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재료값이 너무 올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료급식 시설은 서민 생활의 마지막 노선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용객 대부분이 사정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이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후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지속적인 급식이 불투명합니다. 지자체와 사회단체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복지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설/칼럼 19면

## 강원도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 지금부터가 중요

강원도와 원주시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와 원주시의 사실상 1호 투자 유치 성공 사례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국내 강원도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도가 여전히 매력 있는 투자처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원주 동화농공단지에 종업원 105명 규모의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이 기업은 이번 투자 협약 후 83억원을 새롭게 투입해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추가 고용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가 크다.

도와 원주시가 이번 투자 유치 성사를 기점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확보에 박차를 가하

로 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많은 일이 그러하지만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책상머리에서의 결재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땀흘려야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와 원주시의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기업 환경과 미래가 지역의 정서와 희망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지역 투자가 기업의 사업 확장과 외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가 이롭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도와 원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 그래야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대상 기업으로 압축한 대기업 16곳, 중견기업 60

곳, 중소기업 870곳 등 총 1,046개 기업의 접촉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유치 기업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속적인 관심, 꾸준한 공략은 물론 이해, 설득 등이 필요하다. 모든 것은 단기간에 성취하기 어렵다. 특히 미래의 외국 기업 유치는 몇 가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돈 드는 인센티브를 새로이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돈 안 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道·원주시, 美 본사 둔 글로벌 기업 투자 협약  
대기업 16곳 등 총 1,046개 기업 접촉 나서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또 지금까지 지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취한 많은 정책 중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여겼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반(反)외국인 투자기

업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비쳤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 투자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투자를 회피하는 상황에서 공통적인 점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고용 및 내수 증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문화가 바뀌어야 하며, 경직적인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진정으로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직접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사설/칼럼 21면

### 전문인력 강화 영월군 행정 주목된다

-문화도시업무대거공채,일부지자체 측근인사 경종울리길

영월군이 법정문화도시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전문가 대거 확충에 나섰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상근직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화도시본부장, 6급 정규직 부서원 4명을 공개채용 중입니다. 비상근 감사 1명에 대한 채용 공고도 나와 2월 9일까지는 대표이사과 감사, 10일까지는 본부장과 6급직 응모를 마감합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관광축제본부장과 부서원도 공채할 예정입니다. 행정에서 전문가를 부분 채용한 적은 있지만, 조직 개편을 거쳐 광범위하게 외부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자격요건을 전문성에 부합하도록 강화해 더 주목됩니다. 대표이사는 박사학위학력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7년 이상에 문화예술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로 발탁하려는 의도는 탁월한 적임자를 뽑아 단기적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인 미래안목으로 제대로 초석을 놓으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행태 중 고질적

인 병폐로 등장한 것이 보은 인사, 측근인사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있을 선거판을 염두에 둔 인사가 이뤄질 때마다 빈축을 사고 있지만 개선이 더딥니다.

측근인사 및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먼보은 인사는 지자체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입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각종 지자체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책임자와 사무총괄직으로 이동해 '제2의 공직'과 다름없이 직업으로 삼은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역량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힌 결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력의 손실, 지역주민 손해로 돌아옵니다.

영월군은 2000년대 초반 신활력사업으로 '박물관도시'에 착수해 과거 폐광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강릉, 춘천과 같이 시단위가 아닌 군단위에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자랑할 만한 성과입니다. 이번 외부전문가공채에 대해 영월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라고 밝힌 것처럼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인재를 발탁해 문화도시 성공은 물론 인사행태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설/칼럼 19면

## 법인 폐업 매년 증가, 양질 일자리 창출 가능하겠나

강원도 내 법인사업자의 폐업이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법인 폐업 증가는 도내 고용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본보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도내 법인 폐업신고 건수는 2017년 1,332건에 달했으나 2018년 1,244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279건, 2020년 1,312건, 2021년 1,421건, 2022년 1,507건 등으로 5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였던 도내 법인 폐업 증가율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021년 8.3%, 2022년 6.05%로 2년 연속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폐업 수는 큰 폭의 변화가 없던 점을 감안하면 법인의 경영 환경 악화가 더 심각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 경력이 길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이 신생 기업에 쏠리는 동안 오랜 기간 일자리를 창출해 온 장수 기업들은 정책에서 소외되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기업 생멸 행정통계’ 따르면 도내 신생 기업 생존율은 1년 차에 65.5%로 전국 평균(64.8%)보다 높다. 그러나 이후 연차가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감해 7년 차엔 23.5%로 하락하면서 전국 평균

(25.1%)보다 1.6%포인트나 떨어졌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수 향토기업은 지역의 자량이자 지역민의 비빌 언덕이고, 일자리와 먹거리의 원천이다. 이런 토종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 기업들이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건 경기 침체 속에서 크게 늘어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이자가 밀려 한계기업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도산 수순으로 이어진다. 지역경제를 이끌던 기업이 사라지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층의 이탈 현상을 부추긴다. 혁신과 성장의 마중물로 향토기업을 키우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하는 100년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외지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에 혈안이 돼 정작 주민과 동고동락해 온 지역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늦기 전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온 향토기업이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망한 향토기업을 돕는 것은 기업 유치를 능가하는 효과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